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44호

2013 상반기 한반도 위기진단과 신뢰프로세스

기획 취지

코리아연구원은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상반기 조성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 차원에서 북한, 미국, 중국 정부의 정책을 진단하고 제언을 3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획에는 서보혁(북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홍서(중국/동덕여대) 정대진(미국/연세대) 등 국가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1] 북한, 강화된 핵능력 위에 경제와 평화로 가는가?,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7/17)
- [2] “한반도 안정과 평화.” 대중정책의 키워드
<박홍서, 동덕여대> (7/31)
- [3] 북미 직접대화를 위한 북한의 선택지
<정대진, 북한통일학대학원연구협의회> (8/8)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코리아연구원(이사장: 이재정 / 원장: 김연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 외교, 경제 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

북한, 강화된 핵능력 위에 경제와 평화로 가는가?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 I. 3차 핵실험으로 체제 안보 자신
- II. 경제·핵 병진노선의 가능성
- III.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노력
- IV. 대외관계 개선 없는 병진노선의 한계

2013년 상반기 북한의 행보는 3차 핵실험과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핵 무장력을 강화한 바탕 위에서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이를 위해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I. 3차 핵실험으로 체제 안보 자신

북한은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바로 그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핵실험의 주된 목적이 미국의 적대정책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을 끝까지 지키려는 선군조선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핵실험이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정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은 물론 선군정치, 한반도 군사적 긴장 등 모든 문제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원인을 두고 있다. 여기에 밀로셰비치, 후세인, 카다피 정권 등 미국과 대결해온 정치세력들이 군사공격으로 제거된 점을 의식해왔다. “핵억제력을 못가진 나라들은 제도 전복을 노린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간섭책동에 속수무책인 것이 현 세기의 엄연한 현실”이라는 북한의 인식이 그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조선(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 혹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핵억제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며 핵실험을 정당화 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그보다 1개월 앞서 단행된 장거리 로켓발사와 한 쌍을 이룬다. 장거리 로켓발사는 우주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양 측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두 사건에 대해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087호와

2094호를 채택하였다. 북한에 대한 상업, 금융제재가 더욱 강화되었는데, 결의는 두 사건 관련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물론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 해상검색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예상한 것처럼 북한은 핵무장 능력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를 천명하였다. 즉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이 자신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대화마당과 협상탁자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다”고 말하였다. 3차 핵실험을 전후로 북한이 제시한 핵협상 정책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조건에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앞으로 우리와 미국 사이에 균축을 위한 회담은 있어도 비핵화와 관련된 회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2013.4.18.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 말하자면 북한은 강화된 핵 능력을 버팀목 삼아 미국과 새로운 협상, 즉 평화체제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명분삼아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 나아가 3차 핵실험은 북한에게 안전보장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경제건설에 집중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II. 경제·핵 병진노선의 가능성

북한은 작년 12월 12일 발사한 인공위성 로켓, 즉 광명성3호 2호기가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기술사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추진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들였다. 또 미국을 포함한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며 공개적으로 진행하였다(미국인 불참). 2012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를 북한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 국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이어 북한 외무성은 그것이 김정일의 유훈이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고 규정하였다.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연이어 단행한 데 이어 북한은 3월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핵무력 건설 병진’ 전략노선을 채택하였다.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한 경험이 있는 박봉주를 다시 한번 내각 총리에 임명하는 조치가 동반되었다.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은 자위적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다.”고 규정하고,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제·핵 병진노선을 전개할 대외 환경은 극히 곤란하였다. 유엔 안보리의 촘촘한 대북 제재가 가동되고 있었고 거기에 중국까지 동참하는 양상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남한, 미국과 대화의 계기를 찾지 못하였다. 통상적이라 하기에 공격적 태도가 뚜렷하게 드러난 3~4월 한미 간의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이 북한의 막말 공세를 연출하였다. 유례가 없는 미군의 핵군사력 시위는 동아시아 핵 도미노 차단용이란 의미가 있었지만, 북한에게는 핵무장 정당화 논리를 강화시키는 한편 경제·핵 병진노선을 제약하는 요소로 다가갔다.

대북 제재와 남한, 미국의 대북 압박을 조건으로 경제·핵 병진노선이 이룩하기에는 어렵다. 북한 스스로 유효수요를 창출하거나 공급정책을 전개할 자체 투자 요인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대외환경 개선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4월 최고조로 올라간 군사적 긴장이 내려가 진정 국면을 거치면서 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우방국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적대세력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이 그 움직임의 실체였다.

Ⅲ.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노력

5월22일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환경 개선 의사를 피력하고 중국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최룡해 국장은 “조선은 정말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고 싶다. 조선은 평화적인 외부환경을 조성하고 싶다. 조선은 관련 각국과 공동으로 노력하고, 6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타당하게 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중국이 견지해온 한반도정책 기본방침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전제로 중국이 북한의 행보를 지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어 북한은 남한, 미국에 대화를 제의한다. 6월 6일 남북 당국회담(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 6월 16일 북미 고위급 회담(국방위 대변인 중대담화)을 각각 제안하며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남북회담 제안은 미중 정상회담 하루 전이었는데, 회담 의제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6.15공동선언, 7.4공동성명 공동 기념, 적십자 직통전화 재개통 등이었다. 의제와 회담의 격, 제안 시점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또 북한은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며 의제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평화체제 수립, ‘핵 없는 세계 건설’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는 장관급회담 준비회담으로 이어졌지만 회담 대표의 격 문제로 결렬되고, 대신 개성공단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회담 제의에 박근혜 정부가 충분한 대응전략이 마련되지 않아서, 혹은 북한의 제의에 의심이 많아 지연전술로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북미 고위급 회담 제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7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시간만 벌여줄 뿐”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관건은 구체적인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신뢰할만한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나타냈다. 그보다 앞선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지만 6자회담 등 구체적인 대화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이 북한의 ‘위기외교’를 경고할 뿐이었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은 중국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6월 7~8일 캘리포니아 미중 정상회담, 6월 27일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6자대화 재개, (북핵만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 반면, 한국과 미국 정상은 북핵 불용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번, 오바마 대통령도 간접적으로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비판하였다.

IV. 대외관계 개선 없는 병진노선의 한계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한 한미 양국의 비판은 북한의 핵무장력 강화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정책을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도움을 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현 대북 제재 조치를 유지하고, 중국까지 포함시킨 대북 압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핵 병진노선을 전개함에 있어 한국, 미국, 일본의 지지를 구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연초 높은 군사적 긴장을 지나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한과 미국에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어 남한이 추진하려는 한미중 3자 전략대화의 효과를 사전 차단하는 의미가 있고, 유럽과 동남아 등 국제사회의 투자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기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북 투자는 어렵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관계개선이 선행되어야, 최소한 병행해야 한다. 북한이 최근 보이는 남한,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물론 남한과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지도 관찰 대목이다. (2013/07/17)

“한반도 안정과 평화,” 대중정책의 키워드

박홍서
(동덕여자대학교 연구교수)

- I.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했는가?
- II. 중국의 대북정책? 중미관계를 읽어라!
- III. ‘한반도 안정과 평화.’ 대중정책의 키워드

I.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했는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급격히 악화되던 한반도 정세는 5월 최룡해 특사의 방중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이전의 북핵위기 상황들에서 나타났던 양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북한이 벼랑끝 전술로 한반도 긴장을 극대화시키면 동맹 파트너인 중국은 직간접적인 설득과 압력을 통해 위기상황을 ‘뒷장리’하는 패턴이 또 한번 반복된 것이다. 북한의 1, 2차 핵실험 당시에도 중국은 각각 탕자쉬엔과 원자바오를 파견하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

사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전후해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기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중국내 일부 언론은 북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였고, 중앙당교의 『학습시보』 부편집장은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서방언론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북한에 부정적인 중국내 여론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기도 하였다. 인터넷상에서는 북한지도부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까지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 이후 전개된 상황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후견국임을 시사하였다. 물론, 3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이전보다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3차 핵실험의 ‘타이밍’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북한의 1,2차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금융제제라든지 2.13합의의 불이행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행태를 일정 정도 양해할 여지가 있었다. 그에 비해 3차 핵실험은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피로감이 보다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최룡해 특사의 방중 및 리위안차오 중국 부주석의 방북 등을 통해 북중 양국이 우호관계의 재확인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만이 ‘프레임 속의 불만’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II. 중국의 대북정책? 중미관계를 읽어라!

중국은 왜 북한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논리적으로 상황,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가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그 원인이 행위자들의 특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처한 구조적 환경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미 관계는 바로 그러한 구조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정치가 여전히 무정부적 상태라면, 국가들은 최고목표인 생존을 위해 국가간 세력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으로서도 패권국 미국과의 관계설정은 북핵문제를 포함하는 대외관계 수립에 있어 거의 최우선의 고려대상인 것이다.

지난 6월 시진핑-오바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제기한 ‘신형대국외교’는 이러한 중국의 고민이 투영된 정치적 개념이다. 사실, 신형대국외교 개념이 기반하고 있는 이른바 ‘구동존이(求同存異)’ 원칙은 1970년대초 미중관계 개선 시기에 이미 주창되었던 논리다. 보다 현실적인 맥락에서, 신형대국외교 개념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강대국들간 협조체제를 새롭게 묘사하는 레토릭에 불과할 수 있다. 즉, 1814년 빈체제, 1921년 워싱턴체제, 그리고 1945년 얄타체제와 유사하게 신형대국외교 개념은 1990년대 후반 출현하기 시작한 미중간 협조체제의 정치적 수사인 것이다.

보편적으로 강대국간 협조체제는 상호간 출혈 경쟁으로 인한 이익훼손을 방지하는 것을 그 핵심 목표로 한다. 경제학적 카르텔 구조와 그 논리가 동일한 것이다. 미국은 국제문제 관리를 중국에 ‘아웃소싱’함으로써 패권유지 비용을 절약하려 하고, 중국은 그 대가로 원만한 대미관계를 형성해 국가발전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확산에 따른 상호의존의 심화와 상호 핵억지력 보유 등으로 미중간 담합구조는 이전의 강대국 협조체제보다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텔 구조에 내재한 구성원간 불신은 소멸되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의 배반 가능성을 항상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구호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베트남,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몽골 등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에 대한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에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바탕으로 타이완 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려는 것 역시 중국 견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핵문제를 미국의 희망대로 ‘처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미국의 중국 포위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지정학적 가치가 큰 북한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압박하는 것은 전혀 영리하지 못한 것이다. 그보다 중국은 6자회담이라는 자신의 방식으로 북한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미국에 보이고, 아울러 북핵문제가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급변하는 것 역시 차단하려고 한다. 더욱이, 중국은 6자회담을 매개로 한반도 문제로부터 자국이 소외되는 상황 역시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Ⅲ. ‘한반도 안정과 평화.’ 대중정책의 키워드

지난 6월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단호한 입장을 기대했다. 실제로 국내 일부 언론들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기존의 수사적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중국이 한국의 기대대로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란 희망은 중국이 미국의 기대대로 북한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지 않은 ‘자기예언적’ 희망이라 할 수 있다. 중미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중국이 한국의 기대대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한반도비핵화’ 및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그 타깃이 각각 북한과 미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비핵화라는 수사를 통해 북한을 제어하고, 반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수사를 통해 미국의 공세적 대북정책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미관계 및 중북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중국의 딜레마를 드러낸다. 딜레마는 해결책이 없으며 단지 관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중국의 대북정책은 문제의 본원적 해결이 아니라 통제가능한 수준으로의 관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의지를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중미간 경쟁구도가 중국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핵심 요인이라면, 따라서 중국의 대미 안보위협감을 우선적으로 해소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를 역내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집단안보체제로 변화시키는 상황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역내 동맹체제를 자국의 '사유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2009년 동북아 공동체를 주창한 하토야마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상기해 본다면, 동북아 집단안보체제의 수립은 분명 지난한 과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하다.

동북아 안보공동체의 수립이 장기적인 접근이라면, 단기적인 차원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다. 중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이 중국견제의 선봉대가 아님을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시기 한중관계 경색의 핵심적인 이유가 한국의 '노골적인' 친미노선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한중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라 할 수 있다. 사실, 중국에게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한반도 비핵화보다도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중국에게 한반도 핵지대화는 그것이 통제가능하기만 하다면 용인될 수도 있다. 중국은 냉전기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전력이 있으며, 현재에도 우방국인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용인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한반도 분쟁은 중국에게 '악몽'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북한과 동맹관계로 엮여 있는 중국은 한반도 분쟁 발발시 어떠한 형태로든 연루될 수밖에 없으며, 상황에 따라 미국과의 군사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제2의 한국전쟁인 것이다. 중국이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이 진정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희망한다면, 한국의 관점이 아니라 중국의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관념적인 진영논리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독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로 인해 왜곡된 정책 대안이 제시되며 결국 문제해결에 실패한다. 그러나 그 실패의 원인을 사실 분석의 오류가 아니라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불만으로 해소해 버린다. 이러한 편집증적 행태를 대중국 정책에서 반복할 이유는 없다. 현실에 기반한 대중국 정책을 기대해 본다. (2013/07/31)

북미 직접대화를 위한 북한의 선택지

정대진
(북한통일학대학원연구협의회 대표
코리아연구원 협동 연구원)

- I. 북한의 대미 대화 제기
- II. 미국의 반응과 중국의 역할
- III. 김정은과 오바마의 전화통화

I. 북한의 대미 대화 제기

1994년 4월, 북한 김일성 주석은 CNN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제1차 핵위기(1993년)가 불거진 지 일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김 주석은 뜻밖의 멘트를 쏟아냈다. “미국에 가서 낚시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싶다, 핵무기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전쟁을 원하는 자는 제정신이 아니다” 등 파격적인 발언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해 여름 김 주석은 사망한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그의 손자 김정은도 비슷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영국 외교관을 인용해 지난 6월 김정은 제1비서가 “오바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함께 농구경기를 관람한 데니스 로드먼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지난 6월 7~8일의 미중 정상회담 무렵부터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계속 포착됐다. 급기야 지난 6월16일 일요일 휴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방위원회 명의로 북미 고위급 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담화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김일성)과 우리 장군님(김정일)의 유훈”이라고 밝히면서 북미 고위급 회담 의제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문제, 미국이 추진 중인 ‘핵 없는 세계 건설’ 문제 등도 폭넓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담일시와 장소를 “미국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하며 ‘통 큰 제안’을 하는 양 미국에 공을 넘겼다. 작년 12월 로켓발사에 이어 올해 2월 핵실험, 3월과 4월에 계속된 대남위협 및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일련의 호전적 조치를 반전시킬 듯이 보이는 ‘대회전’의 움직임이었다.

II. 미국의 반응과 중국의 역할

담화 발표 당시 워싱턴은 6월15일(현지시각) 토요일 저녁 8시경이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헤이든 대변인은 그날 밤 “발표내용이 있으면 알려주겠다”는 통상적인 답변만 한국 특파원들에게 남겼다. 월요일 조간을 위해 일요일에 정상 근무하는 한국 언론사의 기자들만 한반도 남쪽에서 6월16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과거 2010년 9월28일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할 때 북한은 새벽1시에 김정은의 대장 진급 소식을, 새벽4시에 그의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임명 소식을 타전했다. 당시 미국 워싱턴은 각각 오전 11시, 오후2시으로써 업무가 한창이던 시간이었다.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발표 시각이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미국 현지 시각으로 토요일 저녁에 맞추어 발표된 지난 6월 북미 고위급 회담 제의는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스개소리라도 해야 할 판이었다. 미국의 공식반응도 북한의 회담제의 다음 날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의) 의무를 준수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싸늘하게 나왔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북한의 최대 외교 목표는 북미 직접대화 및 관계정상화이다. 생존을 위해 쉽게 포기할 북한이 아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제의 직후인 6월19일 북중 전략대화에서도 북한은 북미대화 성사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기 위해 협조 의사를 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6월27일부터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 외교부가 공식성명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긍정적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모든 당사국들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고 발표한 메시지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국내 언론에서는 대부분 한·중 정상회담이 북한 핵 불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지만 대부분의 외신은 중국 측 반응과 한국 측 반응을 각각 따로 소개하며 중국 측의 6자회담 재개 의지를 전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었다.

중국이 새삼스럽게 6자회담 카드를 들고 나오는 데에는 기본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협조가 확보되지 않는데 성급하게 6자회담 재개론을 강력히 제기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도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지만 북한도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위해 중국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에 그만큼 협조할 가능성도 높다.

중국이 6월말 한·중정상회담이나 7월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한 것은 6자회담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 역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이해관계와 이에 협조하며 대화국면을 조성해서 북미 직접대화의 징검다리를 놓아보려는 북한의 의중이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아울러 최근 북·중 관계도 지난 7월27일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중국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최고 위급인 리위안차오 국가 부주석을 대표로 파견하면서 지난 3차 핵실험 이후 소원해진 관계가 상당 부분 복원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Ⅲ. 김정은과 오바마의 전화통화

북한의 전방위적인 대화공세에 이제 공은 형식상 미국으로 넘어간 듯이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급한 것이 없어 보인다. 산적한 국내문제로 유권자들이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 미국 내 정치상황에다가 리비아의 카다피를 처단하고, 빈 라덴을 사살하여 수장시킨 바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도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의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더군다나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당사국이자 관련 동맹국인 한국은 세계10위권의 무역대국이며 국제적 위상도 상당히 성장한 나라이다. 미국이 국내 정치 사정, 외교관계의 우선순위 등으로 직접 나서기 힘든 상황에서는 한국에 남북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북한 문제를 ‘위탁관리’를 하며 북미 직접대화는 자연스레 피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는 지난 4월 50년간의 북한의 외교대화패턴을 ‘협상국면 2개월 내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킨 후 5~6개월 내 외교적 보상을 받는 벼랑끝 전술’로 분석·정리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바라보는 미국 조야의 인식은 상당 부분 CSIS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과거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겠다”고 종종 공언하는 것도 이에 기초한다. 또한 올해 북한 ‘전승절’ 행사(7월27일) 참석차 방북한 시리아 대표단을 김정은 제1비서가 따로 접견했다는 소식은 워싱턴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해 보인다. 미국은 북한과 시리아의 오랜 미사일 수출협력관계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비핵화’ 유훈을 이루기 위해 북미대화를 성사시키고 이를 위해 미국에 직접 가서 할아버지 대신 낚시를 하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농구를 하든 뭘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앉아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한다. 스위스 유학생이었으니 통역 없이도 대화가 가능하다. 단, 안부전화나 장난전화는 아닐 테니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등 오고갈 수 있는 대화주제를 가지고 전화를 걸어야 할 것이다.

물론 비핵화 다음에는 미국이 인권이나 기타문제를 걸고 넘어져 북미 수교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 의심하는 북한 입장에서 쉽지 않을 일이다. 하지만 지도자라면 쉽지 않은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도전하며 역사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생활은 ‘인민적’이지도 않은 스위스 유학생 출신이면서 가식적으로 인민복을 입고 다니고 20세기적 할아버지 방식이나 쫓아가려는 행동은 결국 아무 것도 보장해주지 못할 것이다. 자존심도 좋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전화해서 “Hello” 할 줄도 알아야 한다.

‘3AM MOMENT’라는 말이 있다. 중대한 외교안보 사항에 대해서는 한밤중에라도 지구 반대편에서 걸려온 전화도 받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묘사하는 비유다. 미국 대통령은 새벽3시라도 전화를 받는다. 워싱턴 시각 새벽3시, 평양은 오후 5시다. 김정은 제1비서, 퇴근하기 전에 국제전화 한 통화하면 된다. 깜짝발표나 전화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2013/08/08)